與野 "회의 불참석·무세비" 한 목소리

상향식 공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와서 유력 공천권자

에게 '줄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들에게 가서 자신을 알리고 줄을 대는, 그 야말로 국민 지향의 정치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도 "낙하산

식 공천, 당권을 잡은 사람이 엿장수 맘대

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향식 공천 활성화 방안이 문제고, 그런

4당 정책토론회, 특권 포기 공감·선진화법 이견 선거구 조정 국회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맡아야

여야 4당은 12일 오전 중앙선거방송토 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 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총론에는 공감하면 서도 분야별 개혁 방향과 범위 등을 놓고 서 이견을 드러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새누리 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 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 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 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가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 안 제도 강화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 려놓기' 방안과 관련해선 대체로 공감대 를 이뤘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관련해서는 김 위 원장이 "무회의·무세비, (회의)불참석·무 세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고, 원 위원장도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불참하면 한 번만 빠져도 (수당)전 체를 삭감하는 과감한 결단 필요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 입 문제를 두고서는 김 위원장은 "필요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정쟁을 격화하고 정치 불안과 혐오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반대했고, 원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새 정치연합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상향식 공 천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 물국회를 만들었다"며 개정을 요구했지 만, 원 위원장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고, 선진화법으로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면 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 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합진 보당과 정의당도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

이었다", "식물국회의 원인은 청와대 거 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이라며 거들 었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 여야는 모두 국회 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그 기능을 맡아 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 위원 장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농촌 등 낙후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비례대표 수를 줄 여 농촌 지역에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 위원장은 "비례 대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 능"이라면서 "이걸 쉽게 줄이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혁신위원장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 른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 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韓·中 FTA 국내 피해 불가피 與野 농해수위서 대책 마련 촉구

중국 제품 국산 둔갑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잇따른 FTA 타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 터 한중 FTA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농·축·수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분야별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따져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중국 김치 등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한국 식품처럼 위 장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 다"며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인 줄 알고 먹는 일은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느 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FTA로 인한 피해보전 직불 금 제도의 '수입기여도'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기여도란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를 적용

하면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 부가 수입기여도를 계산할 때 한우 수 요가 고정돼 있다고 전제해 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수입 증가 요인 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 원은 "한우 수요가 고정돼 있다는 전 제하에 수입기여도를 계산하면 수입 농산물이 가격 하락에 미치는 정도가 왜곡돼 축산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이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 결정 후 밥쌀용 쌀 수입 비중(30%) 등 쌀 개방 이전에 적용해 온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 규정이 없어 짐에 따라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 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민은 간접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 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었는데 밥쌀 용 쌀 수입 예산 7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장관이 농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이준석 살인죄 무죄는 '법리 오해'"

새정치 임내현, 법사위서 주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에 대 해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은 '법리 오해'라 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사진) 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심 판결 은 기관장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를 인정하면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리 검토하여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이 선장은 선원 법상 구조의무와 침몰이라는 선행행위에 따른 구조의무가 있어서 승객들의 사망이 라는 결과 회피에 대한 적극적 작위를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급속하게 기울 어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구 호조치를 하지 않았 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은

승객들이 익사할 것이라는 결과를 인지한 것이며, 탈출시기를 놓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 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이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결 국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자신만 탈출한 행위는 승객들에 대한 살인과 동등한 형 법적 가치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피아 방지법'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퇴직 후 취업제한 3년으로 연장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 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 법')이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안행위 법안 심사소위는 전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 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 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 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 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이 있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 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 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 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 다.

또 취업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 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 병원, 사회복지단체 등을 추가로 명시했

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하고, 적용 기 간은 퇴직 전 2년간 소속했던 기관이 처리 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 록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광주 서을 위원장 3명으로 압축

조영택·정상용·김하중 경선 순천·곡성 위원장은 '안갯속'

새정치민주연합 조강특위(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 서 을 지 역위원장 후보를 조영택·정상용 전 의 원,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으로 압축 하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선관위(선거관 리위원회)는 조강특위의 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역위원장 경선 일정과 방법 을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 면 지역위원장 경선은 전당대회 일정 등 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주말에 나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순천·곡성 등 일부 지역위원 장 선출 방법을 놓고 조강특위 내부 이 견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 경선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

경선 방법으로는 현재 대의원이 없다 는 점에서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유력한

상황이며 지역구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도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하지만 순천 · 곡성 지역위원장 선출은 아직까지 안개속이다. 경선과 보류 여부 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르면 13일 조강특위에서 최종 결정이 지어질 가능 성과 함께 다음 주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순천·곡성 지역위 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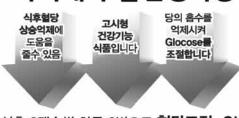
하지만,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 가왔다는 점에서 공석으로 남겨두기 보 다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거나 내 부 심사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지역위원 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모 위원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주말에나 경선이 실시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일 부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 이견이 있 어 경선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유한데다
나는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고시형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 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o M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圖 1899-3975 H.P 010-3598-7080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는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샘처럼 솟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1. 14(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① 하반기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④ 토지 大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⑤ 3천~1억 소액투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게재중





매일이가 붙는 통장! 단 하루만 알게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될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 • 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